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영지축은행 226-0180

광주日報

광주 -2/11℃ 목포 -1/11℃ 여수 1/10℃

우람학원 창학 60주년
제 2의 창학원년, 출발 2010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단기 4343년 (음력 2월 2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25호 1판 2010년 3월 17일 수요일

MB 감세정책, 지방재정 멍든다

부동산교부세 2008년 1249억→올해 250억…복지예산 재원 비상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방재정'이 멍들고 있다. 복지업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사회복지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의 감세로 인해 부동산교부세는 오히려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광주시의 사회복지예산은 8천215억 원으로 지난 2002년에 비해 4배 이상이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될 부동산교부세 보전액은 250억 원(추정)으로, 지난 2008년의 1천249억 원에 비해 20% 수준에 그쳤다.

광주시는 종부세 도입 이후 지난 2006년 364억 원, 2007년 687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온 부동산교부세 보전액을 사회복지예산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종부세 감세정책으로 부동산교부세가 크게 감소, 사회복지예산의 재원이 크게 부족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광주시는 특히 올해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아 정부 감세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광주시의 올해 사회복지예산은 8천215억 원으로, 지난 2002년의 1천957억 원에 비해 4.2배 증가해 전체 예산 가운데 무려 2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 광주시 전체 예산은 1.8배 증가하는 데 그쳐 가뜩이나 취약한 지방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광주시 부동산교부세 보전액 추이

	부동산교부세 보전액	증감액
2006년	364억원	
2007년	687억원	+323억원
2008년	1249억원	+562억원
2009년	382억원	-867억원
2010년(추정)	250억원	-132억원

■광주시 사회복지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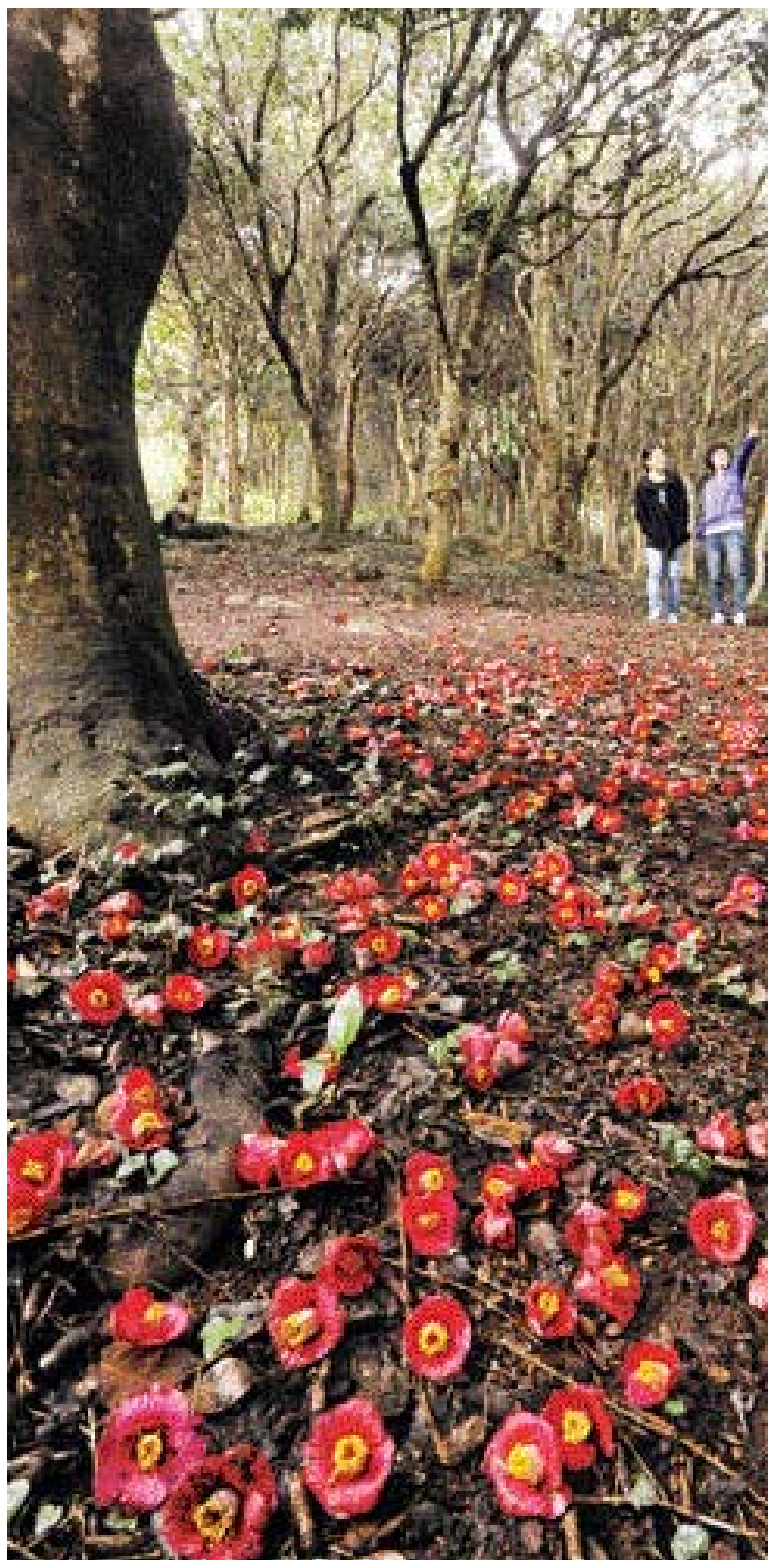
	사회복지예산	증감액
2003년	1957억원	
2006년	3835억원	+1878억원
2009년	6953억원	+3118억원
2010년	8215억원	+1262억원

정부는 지방재정 상태가 나빠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16개 시·도 모두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감소 규모가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 규모보다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세입의 순감소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한 2008~2012년 지방재정 세입은 30조1천741억 원 감소하지만, 2010~2012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세입 순증 효과는 4조4천35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에서 국비 지원 비율을 늘리고, 신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재원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는 궁극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분야로, 취약한 재정구조를 지닌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떠넘긴다면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마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바람에 져도 아름다운 동백 16일 강진군 백련사 동백숲길. 붉디 붉은 동백꽃은 피었을 때 보다 떨어지고 난 다음이 더욱 아름답다. 봄을 시샘하는 강풍에 봉오리째 떨어진 동백꽃들이 마치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하다.

/강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론조사 50%+당원투표 50%〉

전남지사 후보 '체육관 경선'

민주당 광주시장은 '배심원 50+당원전수조사 50'

야권연대 무공천 남구·순천·강진 거론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시민공천배심원제 50% +당원전수여론조사 50%' 방법으로 치러진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는 '도민여론조사 50%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로 결정된다. 〈관련기사 3·4·5면〉

6·2 지방선거에서의 야권 연대를 위한 민주당의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무공천 지역으로는 광주 남구와 순천시가 거론되고 있으며 강진군도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공직후보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광주시장 후보 선정방법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 50%+당원 전수여론조사 50%'의 당초 안을 확정했다.

앞서 강운태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당원 전수조사 50%도 괜찮다"고 하는 등 광주시장 후보들이 대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시장 후보 압축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공심위에서는 2배수, 3배수, 4배수 등 다양한 압축안이 제시되면서 합의안이 도출하지 못했다.

공심위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광주시장 후보 면접에 앞서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후보 압축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심위는 또 전남지사 후보 선정을 위한 국민참여경선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도민 여론조사 50%+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안을 확정했다.

공심위는 이날 결정 사항을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별다른 진통 없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야 4당은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등 기초단체장 선거구 40여 곳에 야당 단일 후보를 선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은 잠정 합의에서 광진, 중구, 성동, 강남, 양천 등 서울 6개 구청장과 오산, 하남, 김포, 이천 등 경기 5개 시장 후보를 양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호남 기초단체장 선거 양보 지역은 최종 합의되지 않은 가운데 광주 남구청장, 순천시장, 강진군수 후보를 내지 않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종 결론은 오는 18일 도출된다.

/임동욱·최권일 기자 tuim@

"선거운동 대신 여행 갑니다"

임자농협조합장 23일 보선…"돈선거 불명예 씻자" 후보 2명 합의

돈선거' 후폭풍으로 인구 3천여명이 사는 섬이 발칵 뒤집혔던 신안군 임자농협조합장 보궐 선거가 오는 23일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과열, 돈선거로 얼룩졌던 이전 선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지난 12일 후보 등록을 마친 정태실(60·전 임자농협 이사), 김성수(57·전 임자농협 전무)씨 등 후보 2명은 집에서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깨끗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양 후보는 공명 선거를 위해 17일 오전 11시 임자중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를 마친 후에 임원 1명, 농협직원 1명과 함께 오는 23일 선거 때까지 타지역으로 여행을 가기로 합의를 했다.

이번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전화, 컴퓨터 통신, 합동연설회 개최,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보, 소형 인쇄물 발송의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당초에는 지역 원로들이 후보간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기로 했으나 선거기일이 얼마 남지않아 시간이 임박하고 가열 조짐이 있어 민주방식 선거로 조합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신안군 선관위는 조합원과 기관단체, 종교단체 대표 등에게 공명선거 홍보물을 보내고 직원을 상주시켜가며 돈 선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6일 오전에는 신안선관위 김용환 사무과장과 농협 목포·신안지부 박종수 지부장이 임자도를 방문했다.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주민들은 "이번 선거만큼은 정말 돈 안 쓰고 깨끗하고 치렀으면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돈을 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신안 임자농협조합장 선거 당선자 박모(64)씨 등 출마자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조합원 1천여 명에 대한 확인 조사가 끝나 돈을 받은 조합원 35명을 신안 선관위에 통보했으며, 다음주께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